

제3장

전자정부와 정부개혁

— 미국과 중국의 사례 비교분석

E-government and Government Reform

— Comparing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ase

정종필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손 붕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이 논문은 필자의 다음 논문을 발전시켜 포함하였음.

Jeffrey W. Seifert and Jongpil Chung, "Using E-Government to Reinforce Government-Citizen Relationships: Comparing Government Reform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v. 27, n. 1 (February 2009), pp. 3-23.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의 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413-B00006).



정보통신기술



U.S

中國

미국

중국

투명

개혁

시민

감독

서비스

효율

협력

통제

참여

부패 예방

MARKET

官

미국과 중국의 전자정부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정부의 도입은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관계를 촉진시키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전자정부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두며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의 전자정부 관련 핵심 정책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전자정부가 각국의 정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using electronic government (e-government) to provide better service to their citizens and improve each government's internal efficiencies and effectiveness. However,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e-government provokes the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and provides customer-centric service. In the case of China, e-government represents a means to bring local governments under greater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paper will analyze the major e-government strategies of both country comparatively and attempt to answer two questions: How is e-government transforming the governments of the U.S. and China? and What is the major influence of e-government on government-citizen relationships in each country?

KEY WORDS 미국 United States, 중국 China, 전자정부 Electronic Government, 정부개혁 Government Reform, 정부와 시민 관계 Government-Citizen Relationships, 고객 중심 서비스 Customer-Centric Service, 통제 Control

I 전자정부의 개념과 문제 제기

전자정부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전자정부 하면 온라인상으로 신청서나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장이나 국회의원에게 불평이나 건의사항들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2004년에 발간된 『유엔의 세계 전자정부 준비 현황 보고서(UN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2004)』에서는 전자정부를 “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기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United Nations 2004, 15)”이라고 정의했다.

전자정부는 종종 민주화의 원동력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칼라실(Shanthi Kalathil)과 보아스(Taylor Boas) 같은 학자들은 정보기술이 시민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Kalathil 외 2003). 이 글에서는 유사한 도입 배경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에서의 전자정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 두 나라 간의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 전자정부가 관료주의적인 권력을 분산시키며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관계를 촉진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지만, 구축 방식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통제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미국에서의 전자정부는 정부를 보다 더 시민 중심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미국의 전자정부는 시민들이 정보와 서비스를 접하고 정부와 교류할 수 있는 대안 채널

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강화시킨다. 반면에 중국 지도부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중국 전자정부의 주요 목표는 서구 여러 나라의 목표와는 많이 다르다. 중국의 경우 전자정부는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자정부 관련 정부문서와 전자정부계획안 등을 토대로 정부개혁이 각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각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전자정부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가? 전자정부가 미국과 중국 정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이 각 나라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글은 도입부와 이번 연구의 기본 토대가 된 이론에 대한 논의, 미 연방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정부 계획안과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계획안에 대한 고찰, 미국과 중국의 전자정부 진행안에 대한 비교 연구와 결론 등 총 여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전자정부에 대한 사회구성론적인 시각

정보통신기술이 각 국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이나 사회구성론적인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기

술결정론은 과학적 혁신이 사회변혁을 가져온다는 기본적인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Rheingold 2001; Toffler 외 1995). 기술결정론자들은 기술의 영향은 단순하여 이해하기 쉽고, 사회나 문화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이 시각은 세부적으로 낙관론(optimism)과 비관론(pessimism)으로 나뉘는데, 낙관론자들은 현대기술이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기술적인 진보와 민주화를 연관시키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기술이 개인이나 단체가 정보를 접하기 쉽게 만들어 주며, 인권을 개선하고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Singh 2002).

비관론자들은 기술이 사회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낙관론자들과 견해를 같이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 및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DiMaggio 외 2001, 310). 비관론자들은 이미 현존하는 경제·사회적 격차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전자정부 이용에 있어서 특권을 가진 소수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인터넷에 더 잘 접속할 수 있으며, 또한 자원을 더욱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회구성론자들은 기술을 국가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정 요소로 보기보다는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조직 안에 얽힌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간주한다(Wendt 1987, 335-370; Onuf 1989). 즉, 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술 자체라고 보기보다는 그것을 만들어내고 이용하는 개인이나 사회집단들이며, 기술 역시 그러한 사회적인 틀 속에서 만들

어진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은 규제와 법에 따라,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민주적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권위주의적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자정부의 경우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내재된 기술이 가진 정치적인 함의와 사회적인 함의는 해당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내리는 경제적, 법적 또는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기술결정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에서는 종종 기술을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으로만 규정하며, 개별적인 행위 주체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로는 민주화 스펙트럼에서 볼 때 거의 양극 끝에 있는 미국과 중국이 거의 동일한 기술을 활용해 얼마나 서로 다른 정치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기술이 정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사회구성론적인 접근방식을 택했다.

바버(Benjamin Barber)는 기술이 민주주의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오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인 경우에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바버는 “……기술은 아직도 의사소통의 한 수단일 뿐이다. 기술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지 못한다(Barber 1998, 588)”고 말했다. 인터넷과 권위적인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칼라실과 보아스는 “인터넷은 단지 컴퓨터를 연결하는 연계 수단일 뿐이다.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한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한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다(Kalathil 외 2003, 2)”고 말했다. 이들은 인터넷이 비록 국경도 없고, 통제하기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영역 내에서 인터넷의 접속과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체제의 경우 국가가 권력에 대한 독점력을 강화하는 데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III 미국에서의 전자정부

미국은 전자정부를 통하여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관계를 촉진시키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늘날 미국 전자정부 사업의 시초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연방정부에 의해 전자정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2001년 8월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대통령의 관리의제(the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PMA)’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관리의제’는 민간 사업체(business-like)의 관행이나 원칙의 적용을 강조하며, 시민 중심적(citizen-centric)이고 결과 지향적(results-oriented)이며, 시장에 기반을 둔(market-based) 연방정부의 건설을 강조하는 ‘정부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the President’s vision for government reform)’에 대한 내용이다(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01, 4).

‘대통령의 관리의제’에는 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 of Human Capital), 경쟁적 조달(Competitive Sourcing), 재정실적의 개선(Improved Financial Performance), 전자정부의 확대(Expanded Electronic Government), 예산과 성과의 통합

(Budget and Performance Integration)이라는 다섯 가지 범정부 차원의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다(Seifert 외 2009, 6). 특히, ‘대통령의 관리의제’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관리 개선과 비즈니스 과정의 단순화 및 각 정부 부처 간의 정보 흐름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존 업무과정을 단순히 자동화시키기보다는 정부를 정부 부처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적인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01, 23). 이는 2001년까지 미 행정부가 타 부처 시스템과의 연계성이나 상호 운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 부처의 요구사항에 따른 정보화 투자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공무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비판에서 나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관리의제’에서 전자정부의 확대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계획안이다. 전자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정부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해 효율성, 효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증대시킬 정부개혁의 주요 수단인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2년 12월에 제정된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을 통해 전자정부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1.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대통령의 관리의제’에서 제안한 시민 중심적, 결과 지향적, 시장에 기반을 둔 연방정부의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전자정부 서비스 및 절차의 관리 및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정

부법을 제정되었다. 이 전자정부법의 목표에는 연방정부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적인 리더십 구축, 인터넷에 기반을 둔 정보 통신기술의 활용으로 비용 절감, 그리고 이를 통한 정부에 대한 시민 참여 증진, 전자정부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부처 간 협력 증진, 좀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방정부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Seifert 외 2009, 7).

부시 정부는 전자정부법을 통해 4대 분야 24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연방정부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예산처에 전자정부국(Office of Electronic Government)을 신설하였다. 4대 분야 24개의 사업은 정부 대 시민 분야(G2C)의 5개 사업, 정부 대 기업 분야(G2B)의 6개 사업, 정부 대 정부 분야(G2G)의 5개, 정부 내부의 능률성 및 효과성(Internal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EE) 분야 8개 사업으로 4대 분야별로 포트폴리오 담당자(Portfolio Manager)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였다(표 1 참조). 정부 대 시민 사업과 정부 대 기업 사업은 시민과 기업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받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정부 대 정부 사업은 지방-주-연방정부 간의 정보 흐름을 통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부 내부의 능률성 및 효과성 사업은 민간 분야의 모범사례를 정부 부문에 적용하여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및 비용절감을 위해 시행되었다(구 한국전산원(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2005, 12).

부시행정부는 또한 전자정부법을 통해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

표 1. 미국 4대 분야 24개 전자정부사업

분야	24개 전자정부 사업명	담당 부처
정부 대 시민(G2C)	정부지원자격 조회	노동부
	정부대출서비스	교육부
	개인 세무신고 서비스	재무부
	여가생활 원스톱 서비스	내무부
	USA 서비스	총무처
정부 대 기업(G2B)	비즈니스 게이트웨이	중소기업청
	규정제정	환경청
	기업 세무신고 서비스	재무부
	연방재산매각	총무처
	무역질차 합리화	상무부
	통합건강정보	보건복지부
정부 대 정부(G2G)	재난관리	국토안전부
	전자사망기록	보건복지부
	지리공간정보 원스톱 서비스	내무부
	정부보조금 서비스	보건복지부
	공공안전 무선통신	국토안전부
내부효율과 효과증진(IEE)	전자 신원조회	인사처
	인적자원통합	인사처
	e-봉급관리	인사처
	전자기록관리	기록관리국
	e-교육훈련	인사처
	e-출장관리	총무처
	통합조달 환경	총무처
	원스톱 채용	인사처

출처: 김민수, IT를 통한 시민·기업중심 서비스 제공 및 정부개혁: 미국 전자정부 동향 및 시사점, "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2008.4.), 1. 수정

(Chief Information Officers Council, CIOC)를 명문화하였다. 최고 정보책임자협의회는 연방정부 정보자원의 설계, 개발, 운영, 공유 및 성과와 관련된 기관들의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공식적 범부처 기관 간 협의체(principal interagency forum)이다. 예산관리처는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 총무처(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GSA)와 함께 연방정부기업아키텍처(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FEA)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예산 신청부터 승인, 사용, 평가의 전 과정을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제거하고 정보공유 및 기관 간 상호운영성을 확대하여 보다 시민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최고정보책임자협의회의 명문화와 연방정부기업아키텍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미국행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관과 관료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2. 투명성과 열린 정부에 대한 각서

(Memorandum on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오바마(Barak Obama)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 직후에 발표한 '투명성과 열린 정부에 대한 각서(Memorandum on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에서 전자정부를 통하여 투명한(transparent), 참여지향적(participatory), 협력도모형(collaborative)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The White House 2009).¹ 열린 정부의 핵심전략은 신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열린 정부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신념에서 나온 정책이라 볼 수 있다.

투명한 정부는 법과 정책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각 행정기관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운영 및 결정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대중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은 정보의 주요 이용자 및 그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형식과 포맷(format)으로 개개인을 위해 고급정보를 게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Data.gov', 'eRulemaking', 'ITDashboard', 'Recovery.gov'를 통해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능한 많은 정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참여지향적 정부는 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일반 시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각 행정기관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피드백(feedback)의 기회를 늘리고 개인정보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사이버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도모형 정부는 각 해당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연방/비연방 정부기관, 비영리기구, 민간단체와 시민 개개인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 협력체계의 구축은 부시 행정부에서 진행하였던 연방정부기업아키텍처 사업과 함께 예산승인, 사용, 성과평가를 연계하고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5월에 ‘디지털 정부 전략(Digital Government Strategy)’을 발표하였다(The White House 2012). 이 전략은 ‘투명성과 열린 정부에 대한 각서’를 발전시킨 것으로 네 가지 주요 원칙을 토대로 한다. (1) ‘정보 중심(Information-Centric)’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단순한 문서관리에서 벗어나 개별 개방형 데이터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2) ‘공유플랫폼(Shared Platform)’적인 접근은 해당 기관 내, 기관 간, 민간 부문, 또는 일반 시민들이 협력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정보창출 및 전달 방식에서 일관성을 보장하는데 핵심이 있다. (3) ‘고객 중심(Customer-Centric)’적인 접근은 정보를 창출하고 관리하며 전달하는 모든 방식이 고객의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든, 어떻게든 정부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보안과 프라이버시(Security and Privacy)’를 위한 플랫폼 구축은 정보와 서비스의 안전한 제공과 전달을 보장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당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확인, 인증 및 암호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IV 중국에서의 전자정부

중국에서의 전자정부는 일련의 ‘정보화(信息化)’ 계획과 함께 출발하였다. 국무원은 1997년 ‘국가 정보화(國家信息化)’ 계획에 착수했는데 이 계획은 정보기술을 채택하여 산업화와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 정보화 계획은 1999년 10.5 경제사회 개발계획의 주요 목표로 선정되었다. 그중 ‘골든프로젝트(金字工程)’와 ‘정부온라인프로젝트(政府上兩工程)’는 정보화의 핵심 프로젝트들이다. 골든프로젝트는 중앙정부의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하여 창안되었으며, 정부온라인프로젝트는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이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맨 처음 착수한 프로젝트가 바로 ‘골든프로젝트(金字工程)’이다. 중국 중앙정부와 구 전자산업부는 1993년 정보화를 촉진하고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추진안의 일환으로 골든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본 프로젝트의 목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고 정부가 여러 부처와 산업체를 망라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3) 외국과의 교역 시 관세징수와 수출입허가 제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Ma 외 2005, 18).

‘골든프로젝트’에 의해 구축된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1999년 1월부터 중국은 인터넷 기술을 정부 곳곳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부온라인프로젝트(政府上兩工程)’를 진행해 왔다. 이 프로젝트의 출범에는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그리고 그 외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 정치협상회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감찰원을 포함한 정부부처가 관여했다. 정부온라인프로젝트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를 온

1 현재는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에 통합되었다.

라인상으로 유포하고, (2) 정부의 문서나 아카이브(archive),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며, (3) 전자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문서 전송기능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개선하여 온라인 행정을 실현한다(Ma 외 2005, 29).

전자정부의 건설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정책이 각각 2002년,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2년에 발표되었다. 중국에서의 전자정부는 미국과는 다르게 중앙정부의 감독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통일된 규범과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02년에 중국 공산당에 있는 중공중앙관공청(中共中央辦公廳)과 국무원에 속한 국무원관공청(國務院辦公廳)이 공동으로 발표한 17호 문건인 <국가전자정부 건설에 대한 국가정보화 영도소조의 지도적인 의견(國家信息化領導小組關於我國電子政務建設指導意見)>은 정부의 감독, 통제, 관리와 공공서비스제공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건설은 통일된 기준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中共中央辦公廳, 國務院辦公廳 2002). 중앙정부는 17호 문건을 통해 중앙정부의 의도와 이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밝혔다. 현재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통합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17호 문건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정보를 통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내·외부 네트워크를 중앙정부의 전자정부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17호 문건에 따라 전자정부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4년 후인 2006년에 <국가전자정부의 건설 추진에 대한 국가정보화 영

도소조의 의견(國家信息化小組關於推進國家電子政務網絡建設的意見)》이라는 18호 문건이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문건에는 정부의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17호 문건에서 중앙부서들 간과 중앙-지방정부 간의 정보공유 역할을 하는 내부 네트워크 건설은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공동으로 책임을 맡으며,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네트워크 건설은 국가정보화작업판공실(國家信息化工作辦公室)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 책임을 맡는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중국정부가 전자정부 건설을 시작했지만 외부 네트워크 건설은 2005년부터 시작하였다. 정부 외부 네트워크의 주요 기능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사회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18호 문건의 내부 네트워크(政務內網)²에 관한 내용은 모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네트워크가 전자정부를 통해 중앙정부와 연결되게 하고 행정업무는 가급적 전자정부를 통해 수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中共中央辦公廳, 國務院辦公廳 2002). 정부 내부 네트워크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에 속한 각 부서, 지방정부, 부성급(副省級) 및 부성급 이상의 행정기관들을 감독, 통제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건설된 업무네트워크이다(中共中央辦公廳, 國務院辦公廳 2002). 이는 중앙

2 정부 내부 네트워크(政務內網)는 부성급(副省級) 및 부성급 이상의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 운영, 조정, 감독, 정보공유 그리고 정책결정을 위해 구축되는 정부 네트워크이다. 공산당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부서, 정치협상대회, 법원, 검찰원의 업무네트워크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 인터넷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中共中央辦公廳, 國務院辦公廳, "國家信息化領導小組關於推進國家電子政務網絡建設的意見"(2006) 참조.

정부의 절대적인 권위 및 통제력을 확립하기 위해 실행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18호 문건에서 전자정부 건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원칙을 강조하였다. (1) 조직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각 부서와 지방정부는 국가정보화 영도소조의 지도하에 협력하여 통일된 국가전자정보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2) 투자를 확보해야 한다. 국가전자정부의 건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 문건의 요구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 건설에 관한 프로젝트 심사를 가속화하고 중앙에서부터 성(자치구, 직할시)까지 구축된 전자정부 기간망의 운영 경비는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3) 등급별로 네트워크 건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순조롭게 해야 한다(中共中央辦公廳, 國務院辦公廳, 2006). 각 지방정부는 국가정보화영도소조의 결정에 따라 네트워크를 건설 및 운영해야 하며,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규칙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17호, 18호 문건에 이어 2009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와 재정부(財政部)에서 988호 문건을 발표하였다. 988호 문건은 <국가전자정부 외부 네트워크의 건설 업무를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의 통지(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財政部關於加快推進國家電子政務外網建設工作的通知)>이다. 988호 문건은 18호 문건에서 언급한 '정부 외부 네트워크(政府外網)'³ 건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문건은 세 가지 구

3 정부 외부 네트워크(政府外網)는 국가 비밀이 아닌 정보를 취급하고 사회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네트워크이다.

체적인 지도방침을 제출하였다. (1) 지방정부의 독자적 네트워크는 신속히 중앙정부의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시킬 것, (2) 중앙정부의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된 지방정부는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민서비스 등 정부업무를 수행할 것, (3) 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부업무 수행을 시작한 지방정부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전개할 것(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財政部 2009), 이 세 가지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17호, 18호 문건이 발표된 후 각 지방에서 전자정부 건설속도 간에 불균형이 나타나자 988호 문건을 통해 지방정부에 2010년까지 통일된 기준 아래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財政部 2009).

2012년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의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지도원칙인 <‘12·5’ 국가업무 정보화 건설에 관한 계획(“十二五”國家政務信息化工程建設規劃)>이라는 1202호 문건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서는 내부와 외부네트워크의 건설, 전자감찰시스템 구축 등 15가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전자감찰시스템과 정보공개에 대해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중앙정부는 정보화 건설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며, (2) 각 지방정부는 통일된 규범과 기준에 따라 전자정부를 건설하고 정보의 공개 및 공유를 통해 부패를 예방하며, (3) 공공서비스 모델의 개혁과 정부업무 체계를 혁신하는 동시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부 정보화의 질을 향상시킨다(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12). 이 문건은 또한 전자정부를 건설하는 동시에 신세대 정보통신기술의 도전에 대응하는 정보통신시설을 연구 및 개발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12). 이는 국가기밀 및 정보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밀노출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1202호 문건에서 강조된 전자감찰시스템은 행정심사업무의 감독 및 관리를 위해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共中央紀律檢查委員會), 감찰부(監察部), 국무원정보화작업판공실(國務院信息化工作辦公室), 국무원심사비준제도개혁판공실(國務院審批制度改革辦公室)이 공동 발표한 〈행정심사비준과 관련된 전자감찰업무에 관한 통지(關於開展行政審批電子監察工作的通知)〉를 통해 2006년에 도입되었다. 전자감찰시스템은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각 부서 및 지방정부의 행정심사 전 과정을 CCTV로 실시간 감시하여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업무성과평가를 통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목표가 있다(中共中央紀律檢查委員會, 監察部, 國務院信息化工作辦公室, 國務院審批制度改革辦公室, 2006). 이 시스템은 하급정부가 중앙정부의 명령을 순조롭게 수행하게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막힘없이 집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전자감찰시스템의 도입을 두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으며, 중앙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소한 행정심사 과정만을 전자감찰시스템의 감시 하에 두었다. 일부 지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전자감찰시스템을 전자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강력히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 비서장(秘書長)인 간이성(幹以勝)은 전국 행정심사 전자감찰시스템에 관한 회의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권력의 제약, 정부 자금의 감독과 관리 및 정부업무의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幹以勝 2006). 2006년부터 본격적으

표 2. 중국전자정부에 관한 핵심적인 문건들

문건명	발표기관	연도	내용
국가전자정부 건설에 대한 국가정보화 영도소조의 지도적인 의견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2002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정보를 통일적으로 감독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중앙정부의 전자정부에 포함시킴
국가전자정부의 건설 추진에 대한 국가정보화 영도소조의 의견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2006	정부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 건설의 추진을 강조하였음
행정심사비준과 관련된 전자감찰업무에 관한 통지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국무원정보화작업판공실 국무원심사비준제도개혁판공실	2006	행정심사전자감찰시스템의 도입 감독 및 관리를 강화시킴
국가전자정부 외부 네트워크의 건설 업무를 가속화하기 위한 통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2009	정부 외부 네트워크(政府外網)의 건설이 핵심
'12·5 국가업무 정보화 건설에 관한 계획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2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 전자감찰시스템의 건설 추진 등 15가지 목표 제출

로 시작했던 전자감찰시스템의 구축은 애초부터 중앙정부의 감찰 및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중국 국무원 총리인 원자바오(溫家寶)는 “심사절차를 엄수하고 공개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며 전자감찰 등 현대적인 기술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여 심사과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溫家寶 2009).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律檢查委員會) 서기인 허귀창(賀國強) 또한 2012년 1월 8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전자감찰시스템의 도입을 강조하였다(賀國強 2012). 원자바오 총리와 허귀창 서기 연설의 핵

심내용은 중앙정부가 전자감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권력 수행에 관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감시하며,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데 있다.

V 미국과 중국의 전자정부 비교분석

현재 미국은 정부 개혁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민간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자정부를 활용하고 있다. 즉, 전자정부법을 토대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행정 효율성과 효과성의 향상과 동시에, 고객 지향적 열린 정부 구현이라는 양대 목표 하에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전자정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대 정부, 정부 대 기업, 정부 대 시민 및 내부 능률성과 효과성이라는 4대 핵심 분야에 24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이 결과 지향, 시장 기반 및 고객 중심이라는 정부개혁의 원칙을 전자정부의 역할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예산관리처와 전자정부국을 중심으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노력은 기존 전자정부 사업이 범국가적인 전략 수립 없이 부처 단위 및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된 데에 따른 반성으로 나오게 되었다. 전자정부를 고객 중심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 관료에 대한 서비스로 치중할 결과 기관 간 및 기관 내부의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었고, 범부처 간의 표준 정보기술 시스템의 부재로 시민들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 결과 2002년부터 전자정부를

대통령 관리의제(PMA)에 포함시키게 되었으며 민간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자정부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는 정부를 관료 중심적이 아닌 시민 중심적 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민 중심적인 정부란 정부기관이나 관료 자체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의 장벽을 허물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자거래에 사용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공공 분야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는 서비스 통합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파운틴(Jane Fountain) 교수는 이러한 기술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가 더욱 단순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Fountain 2001, 4). FirstGov 포털(<http://www.firstgov.gov>)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FirstGov는 연방 정부의 여러 웹사이트로 들어가는 단일 관문 역할을 하며 그 밖의 다른 연방이나 각 지방정부 사이트와 모두 연계되어 있다. 즉, 부처가 아닌 기능에 중점을 둬으로써 재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창출하고 여러 부처 간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고 있다.

미국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개혁과 경제 발전이란 거대한 목표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고 있다. 그중 핵심목표는 일차적으로 행정개혁이다. 중국정부는 행정개혁이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정치, 경제 무대에 자국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행정개혁은 중국 지도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현안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여섯 차례(1982, 1988, 1993, 1998, 2003, 2008)에 걸쳐 행정개혁을 단행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 중앙-지방관계의 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전자정부를 통하여 정부의 행정심사비준제도(行政審批制度)를 개혁하고, 지방정부 투명성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주요행사 및 사업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고 중앙정부가 여러 부처와 산업체를 망라해 감독 및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오늘날까지 전자정부를 통하여 정부의 통제와 감시능력을 더욱 강화해왔다. 2006년에 도입된 전자감찰시스템은 중앙과 지방정부에 내부 및 외부 네트워크의 건설을 통해 정부기능을 개선하고 정보망 인프라구축을 통해 각 부처 간 정보자원을 공유하게 하여 행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 및 관리하여 지방 관료들의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중국에서 전자정부는 국가권력 유지와 안보확립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정부의 감시능력을 보강하고 정부가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발하

표 3. 미국과 중국의 핵심적인 전자정부 전략 비교

미국	중국
투명한 정부: 정부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접근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 및 공유	행정개혁을 통한 경제발전: 정부의 기능과 업무처리과정을 개혁하여 효율성 증진
참여지향적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 제공	통일된 규범과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여 부패 예방
협력도모형 정부: 정부기관 간 효과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전자감찰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감독 및 통제

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지방정부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전자정부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산물인 투명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온라인에 올려놓기를 바라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배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 이유로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심사 및 인허가 과정을 중앙정부에 노출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표 3>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핵심적인 전자정부 전략들을 비교분석하였다.

VI 각 국에서 상이한 전자정부의 용도

전자정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부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민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시장 중심적인 민주사회에서 이는 종종 민간 분야에서 배운 교훈을 활용해 정부가 좀 더 시민 중심적이며, 서비스 지향적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UN과 미국 행정학회(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ASPA)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정부는 정부의 업무 진행과정이나 구조를 변화시켜 공공행정기관이 위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United Nations,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2003)”고 하고 있다. 즉, 전자정부는 시민 개개인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해당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데 공헌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자정부가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전자정부는 정부의 업무처리 과정에 기술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개선하고 정부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전자정부를 전자민주주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미국이나 중국 양국 모두에서 전자정부는 각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정부 사업은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 프라이버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민주주의적인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전자정부 추진 안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 감시 및 통제와 같은 비 민주주의적인 특징을 일부 구현하고 있는 듯하다. 러브락(Peter Lovelock)은 중국에서 전자정부의 사용이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국

가 전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Lovelock 1999), 양(Dali Yang)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Yang 2001, 64-69).

따라서 전자정부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전자정부를 도입한다고 꼭 전자민주주의로의 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민주주의는 전자정부를 통해 산출 가능한 여러 가지 결과물 중 하나에 불과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지도자나 사회집단이며, 기술 역시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틀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 한국전산원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2005. 『미국 전자정부의 현황 I』.
- 김민수. 2008. “IT를 통한 시민·기업중심 서비스 제공 및 정부개혁: 미국 전자정부 동향 및 시사점.” 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 Barber, Benjamin R. 1998. “Three Scenarios for the Future of Technology and Strong Democrac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3, no. 4 (Winter).
- DiMaggio, Paul, Hargittai, Eszter, Neuman, W. Russell and Robinson, John P. 2001. “Social Implications of the Internet,” *Annual Review of Sociology*.
- Fountain, Jane. 2001. *Building the Virtual State: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stitutional Change*. Washington, D.C.: Brookings.
- Kalathil, Shanthi and Boas, Taylor. 2003. *The Internet and State Control in Authoritarian Regime: China, Cuba and the Counterrevolution*. Washington, D.C.: Brookings.
- Ma, Lianjie, Chung, Jongpil and Thorson, Stuart. 2005. “E-government in China: Bringing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22, no. 1.
- Onuf, Nicholas G. 1989. *World of our making: Rules and rule in social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Peter Lovelock. 1999. “E-China: Putting business on the Internet.” Virtual China. <http://www.virtualchina.com/infotech/analysis/e-business-101899-1.html> (검색일: 2011.12.30).
- Rheingold, Howard. 2001. *The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NY: Perseus.
- Seifert, Jeffrey W. and Chung, Jongpil. 2009. “Using E-Government to Reinforce Government-Citizen Relationships: Comparing Government Reform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vol. 27. no. 1 (February), 3-23.
- Singh, J.P. 2002.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Changing Scope of Global Power and Governance,” In James Rosenau and J.P. Singh, 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The White House. 2009.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 The White House. 2009.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TransparencyandOpenGovernment (검색일: 2013.1.13)
- The White House, 2012. “Digital Government: Building a 21st Century Platform

to Better Serve the American People.”<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egov/digital-government/digital-government.html>(검색일: 2012. 12.12)

Toffler, Alvin and Toffler, Heidi. 1995. *Creating a New Civilization; The Politics of the Third Wave*. Atlanta, GA: Turner Publishing.

United Nations. *UN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2004: Towards Access for Opportunity*.

United Nations and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2003. “Global Survey of E-government.”

<http://www.unpan.org/egovment2.asp>(검색일: 2012.10.5.)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2001. *The President's Management of Agenda-FY 2002*.

Wendt, Alexander. 1987.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iss. 3, 335-370.

Yang, Dali. 2001. “The Great Net of China.”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22. iss. 4.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財政部. 2009.

“關於加快推進國家電子政務外網建設工作的通知.”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12. “‘十二五’國家政務信息化工程建設規劃.”

溫家寶. 2009. “深入推進廉政建設, 落實改善民生政策措​​施”, 新華網, http://news.xinhua.net/lianzheng/2009-04/10/content_11152653.htm(검색일: 2012. 1.

20).

中共中央辦公廳, 國務院辦公廳. 2002.

“國家信息化領導小組關於我國電子政務建設指導意見.”

中共中央辦公廳, 國務院辦公廳. 2006a.

“國家信息化領導小組關於我國電子政務建設指導意見.”

中共中央辦公廳, 國務院辦公廳. 2006b.

“國家信息化領導小組關於推進國家電子政務網絡建設的意見”.

中共中央紀律檢查委員會, 監察部, 國務院信息化工作辦公室.

國務院審批制度改革辦公室. 2006. 『關於開展行政審批電子監察工作的通知』.

幹以勝. 2006. “進一步加強紀檢監察信息化建設行政審批電子監察系統.” 『中國紀檢監察報』.

賀國強. 2012. “統一思想認識 加大工作力度堅定不移將黨風廉政建設和反腐敗鬥爭引向深入.” 中國共產黨第十七屆中央 紀律委員會第七次全體會議上的工作報告.

필자 소개

정종필 Chung, Jongpil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Kyung Hee University) 조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저 “Weibo and ‘Iron Curtain 2.0’ in China: Who is Winning the Cat-and-Mouse Game?”, “Assessing China’s Influence on Southeast Asia: The Taiwan Issue”, “Comparing Online Activities in China and South Korea: The Internet and the Political Regime”

이메일 jongpil@khu.ac.kr

손 봉 Sun, Peng

경희대학교 경영학과(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박사과정

이메일 blennie1225@hanmail.net